

기획대담

## 한중관계의 회고와 전망 : 서진영교수와의 대담



일시 : 2013년 12월 10일  
장소 : 국민대학교 북악관 618호

### 참가자

서진영  
윤경우(국민대 국제학부)  
이광수(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철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서상민(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사회과학원 원장. 서진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졸업 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다. 서진영 교수는 사회과학의 보편적 언어와 방법, 그리고 이론을 중국연구에 접목함으로써 중국정치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고 중국정치 관련 중요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남기셨다.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오셨다.

저작으로는 『중국혁명사』(1992, 2002), 『현대중국 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 정치』(1997), 『The World After the Cold War : Issues and Dilemmas』(1999), 『동소평과 중국 I · II』(2000), 『변혁기의 세계질서와 동아시아』(2001),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2003), 『21세기 중국의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2006), 『21세기 중국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2008) 등 다수가 있다.

## 한중관계의 회고와 전망

대담 :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윤경우 국민대 교수

정리 : 서상민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윤경우 교수(이하 윤) : 교수님을 대담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학회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가까워서 직접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담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안보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먼저 이야기를 나누시고 한·중 사이의 경제관계, 중국의 미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영토문제나 집단지위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점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데 대담의 서두에서 총괄적으로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진영 교수(이하 서) : 미리 보내주신 대담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질문하신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질문 당 적어도 10분, 20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얘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 미국, 중국의 상호경쟁이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게 전개 될 것 같은데 한국은 두 강대국 간의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바이든(Joseph R. Biden)이 한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시험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슈들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때 마다 양국 간에는 상당히 얼굴을 붉히는 얘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국내적으로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술방식을 빌려 표현하자면 ‘창조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시대 한국외교는 동맹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동맹외교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과의 단결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대응하는 외교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전략적 동반자관계’입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적을 특정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 계속적으로 공존, 공영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동맹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20세기가 동맹외교를 기초로 한 냉전외교였다면, 21세기 외교는 동반자외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외교는 20세기의 동맹외교와 21세기의 동반자외교를 다 같이 품에 안고 가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외교의 최대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을 함께 끌고 가야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맹외교도 지켜야 하고 동반자외교도 지키면서 두 나라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선 우리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1세기 탈냉전시대는 동맹외교이든, 동반자외교이든 공존이 가능한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갈등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중미관계를 미국과 소련 관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의 미·소 관계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적도 아니지만 친구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관계입니다. 중국식 표현대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고 하는 것인데,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은 두 나라는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 적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나라는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 온갖 소리를 다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운명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미국의 외교를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과거 소련과 같이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갈등하고 적대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시점에서 두 국가는 타협하고 협력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부르게 “미국과 중국관계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여 중국을 배척한다던가 반대로 미국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외교는 “미국과 중국은 늘 협력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

지고 미국이나 중국을 공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은 ‘중계외교’ 이든바 ‘가교외교’(bridging diplomacy), ‘복덕방외교’를 해야 합니다. 복덕방처럼 강대국 틈 사이에서 싸우면 말고 흥정은 성사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윤 : 한국외교의 방향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합의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외교가 ‘가교외교’, ‘복덕방 외교’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창조외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한국 역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했는데 ‘창조외교’의 시각에서 잘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 : 사실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물론 우리정부가 국내정치를 고려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앞에서 말한 ‘가교외교’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딱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정부의 외교에 바랐던 것은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이 거의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으로 인해 드러난 사실이지만 근 60년 동안 이어도가 일본 쪽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들어가 있었고, 마라도나 홍도가 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져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60년 동안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것 알고도 다 묵인해 왔습니다. 물론 묵인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이제 와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지난 6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은 국내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이 변경되지 않고 지속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의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서 선포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정부가 초계비행을 이어도 부근까지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군사력, 공군력이 분쟁을 해결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에게 맡겨온 것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역을 획정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포를 해 났지만 중국, 일본공군기가 마음대로 이 구역을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보기만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함으로써 일본하고 중국에게 동시에 방공식별구역을 앞으로 계속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명분과 구실을 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을 수 있고, 중국 역시 서해안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정색하고 자기 나라도 거기다가 굶겠다고 하면 지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큼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아는 견잡을 수 없는 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복잡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도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았으나 “당분간은 좀 참고 견디고 가자. 실리를 찾자” 이런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쟁이 되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유감이다”였습니다. 그런데 환구일보 사설을 보면 한국에 대해 굉장히 뼈아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설에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요점은 한국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한국 것만을 지키는데 급급했다고 하면서 “전술적인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고치면 ‘기회주의’입니다. 전략적인 실용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전술적인 실용주의라는 것은 곧 기회주의이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일본과 중국이 분쟁 중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자기 잇속을 챙겨나가는 영악함을 보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정부가 ‘가교외교’, ‘중계외교’ 또는 ‘신뢰외교’를 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기회주의자로 보면 한국정부의 ‘중계외교’가 설 땅은 없습니다. 신뢰외교가 설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환구일보 사설은 이렇듯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과 관련된 한국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도광양회’의 심정으로 참을 것은 참고 손해가 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외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리외교가 그 정도의 인내력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윤 :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여러 대안을 놓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무 대응도 안하는 것, 시간을 끄는 것 등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서 : 사실은 한국정부가 재조정하지 않았다면 중국과 일본의 조정역할을 자임하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조정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당사자는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일본과 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어도 문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어도 문제에서 우리정부나 우리언론이 영토개념으로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어도를 포기하는 것이 독도를 포기하는 것 정도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생사를 건 문제가 됩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도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시간을 끌어도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EZ로 보면 한국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이 문제를 꼭 독도와 비슷한 문제로 즉 영토주권문제로 몰고 가니까 한국의 협상력이 툭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이 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좀 더 시간을 끌고 가면서 이어도 주변지역,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쳐지는 지역이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일본과 중국 스스로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조정의 명분과 실력을 가진 후에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우리정부가 미지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정부는 조정자가 아닌 분쟁당사자로서 한·중·일 세 국가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진의는 다른데 있었는데 말입니다. 중국은 한국하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미일의 문제인데 한국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중국이 한·중 간 문제는 나중에 대화로 풀 수 있으며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정부에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이러한 중국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마치 자기 권리만을 찾고자 해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너무 경솔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한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협상력에 있어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윤 :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정책을 내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

하게 선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시간을 끌면서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가기에는 현재의 한국정치 지형상 어렵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서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대응을 보면, B52 폭격기를 방공식별구역에 보내면서 공공연하게 중국에 도전했습니다. 이 때 한국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혹시 군사적 충돌이 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민항기들이 이 구역에 들어갈 때 일본정부는 중국에 리포트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니 미국은 되려 일본에 리포트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그 구역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서 하는 메시지, 중국 가서 하는 메시지, 한국 와서 하는 미국의 메시지는 각기 달랐어요. 외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외교를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면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인데 그렇게 국민들의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들 사이에 포커게임과 같이 은밀하게 진행시켜야 하는 것인데 뭘 할지 다 내보이면 게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 : 다음은 경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안보문제와 관련 있기 합니다만 말이죠. 한국정부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조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 : 한국정부의 결정이 좀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중전문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한중FTA 문제로 국내학계에서 논쟁이 된

적 있습니다. FTA나 TPP와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워낙 복잡해서 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이해득실이 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중전문가위원회에 있던 경제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정부가 한중 FTA를 여하튼 결정해야만 할 것 같은데 중국과의 FTA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하느냐?” FTA를 하면 한국에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만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위원회 내에 있던 4~5 명의 경제학자들 모두가 한국경제의 성격상 시점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과도 그리고 중국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FTA를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 논쟁이 많았는데 한중전문가위원회에서는 “FTA 찬성”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중전문가위원회가 FTA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때는 가정 먼저 염두에 두었던 점은, 만일 한국이 FTA를 안하고도 잘 살 수 있다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하지만 FTA를 하지 않고 한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시기 문제와 정도 문제는 FTA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시기와 정도의 문제를 차츰 조정을 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중전문가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거친 후 FTA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FTA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한미FTA를 먼저하고 그 다음으로 한중FTA를 하며, 한중일FTA는 마지막에 하자고 했습니다. 한미FTA를 먼저 하느냐 한중FTA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미FTA를 먼저 처리하고 한중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한중전문가위원회의 제안이 우리정부의 FTA 결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TPP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우리정부가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미숙함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다자적 TPP이건 양자적 한중FTA이건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개방경제로 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담대하게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유리했을 때 먼저 선언하고 추진했더라면 좋았다는 말입니다. 괜히 우리정부가 이것저것 계산하다 뒤늦게 결정하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이 “한국이 계산하다 끝내 저렇게 가는구나”하고, 일본과 미국 역시 한국이 빠르게 결정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가 있나?” 하다가 “어딜 갈 수 있겠어!”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TPP에 참여하고 한중FTA를 갖게 되면 한국을 매개로 한 중국 중심의 경제권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융합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좀 더 장기적 비전과 스케일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틈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보면 강대국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데 최근 방공식별구역 이슈나 FTA 이슈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어 앞의 두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도 이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 : 앞으로는 사사건건 그런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문제와 같은 외교안보의 중요한 이슈들, 중일간의 갈등이나 미중간의 갈등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외교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과의 외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편승’(bandwagon)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린다고 하면 그쪽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강대국에 대한 ‘도전’(challenging)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balancing)이 있는데 양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정권은 확실하게 미국에 ‘편승’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일본은 결코 중국과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미국을 붙잡고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베의 선택이 굉장히 영악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미국에 ‘편승’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하고 영국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편승’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이 일본과 같이 확실한 ‘편승’을 하면 영원히 분단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북한처럼 ‘도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도전적으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

기 때문에 ‘도전’은 우리의 선택의 사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이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균형자’(balancer)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19세기 영국과 같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균형자가 되려면 자기가 선택한 쪽이 확실하게 이겨야 합니다. 승산의 관계가 없는 ‘균형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력으로 보나 국제적인 위치에서 보나 우리는 19세기 영국과 같은 균형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주창한 ‘균형’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드파워’(hard power)만을 통해 균형을 잡을 때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면 되지만 21세기 탈냉전시대에는 세계여론과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도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드파워’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파워’가 세계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도 옛날하고 다르게 세계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들이 국민여론을 의식해 행동을 자제하거나 여론에 유리한 선택을 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지금은 세계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여론이 중요하게 된 지금 ‘균형’도 새로운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연성균형’(soft balancing)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속에서는 한국과 같은 나라도 강대국들이 가급적이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세계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자주의에서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대국 간 협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성균형’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하에서 한국 역시 미국이나 중국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교외교’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는 것보다는 협상과 타협이 좋다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국간 협상을 성사시켜 나가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목표로 제시된 ‘중국의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요?

서 : ‘중국의 꿈’을 말했던 사람은 시진핑 주석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재야 학자가 ‘중국의 꿈’에 대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말한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를 잇는 발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덮는 외피로써의 ‘중국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두 개의 백년’이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나온 슬로건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 외피 속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두 개의 백년’이라고 하면 공산당이 창당되었던 1921년에서 2021년까지의 백년,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수립 이후에 2049년까지의 또 다른 백년을 의미하는데 중국지도부는 2020년대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장쩌민에 의해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도 장쩌민이 제시했는데 2050년대까지 현대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부강, 민주, 문명, 조화”라는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50년대의 목표인 “부강, 민주, 문명, 조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strong china, democracy china, civilized china, harmonious china”인데 좋은 가치는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의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것은 2010년 중국의 1인당GDP가 5천 달러 정도였던 것을 두 배로 높여 1인당GDP 1만 달러가 되도록 해 중등발전국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2050년 되면 현대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세계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우선 실현하지 못할 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GDP 1만 달러 실현이라는 목표를 보면 매우 현실적이며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2050년까지의 현대화 완성이라는 목표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이라는 슬로건은 중화제국의 건설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꿈’을 말하게 되면 곧바로 중화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는 중국지도자들이 자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 그렇지만 중국이 위협을 느낄 만큼 부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화제국의 부흥을 강조하면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만....

서 :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목



하는 것은 전면적 소강상태라고 했는데 1인당GDP가 1만 달러 이상 되려면 상당기간 7~8%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잘 읽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여전히 중국의 제 1차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중화제국의 영광과 같은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덩샤오핑의 밑바닥에 깔린 사상이고 그 사상이 지금도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소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련은 서방세계를 대체할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 정치, 가치, 이데올로기도 서방문명과 달랐던 중국은 서방문명의 기본적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개혁개방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 소련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가 아닙니다. 중국식 자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계속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틀 안에서 중국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앞으로도 2030년대까지 서방과의 완전한 결별은 물론 서방과의 정면대결은 피할 것입니다.

2050년대 중국의 현대화가 완성이 된 이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쩌민의 3개 대표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글로벌경제의 맥락에서 보면 현재 중국경제가 아무리 많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를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양적인 측면

에서의 발전은 달성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경제가 양적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과 같은 질적인 발전까지 미국이나 일본 수준이 된다면 세계경제를 명실공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2050년 이후의 이야기이지만 그 전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방경제의 틀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방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영원히 서방경제에 종속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향후 2~30년 동안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내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일방주의와 횡포에 대해서 중국은 인내하고 실력을 길러내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로 연결되었습니다. 2050년 이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지식인들의 글을 보면 결국 중국문명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새로운 문명을 형성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 : 나는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3단계를 거쳐 갈 것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서방세계의 보편적인 가치와 제도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서방의 프레임 속에 들어 와 그 안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중국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특수성만을 말하지 중국의 특수성을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혁명을 수출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런 언술은 중국의 접근이 소련의 접근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련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말한 것처럼 ‘결정적인 국면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정면대결’의 접근법을 취했다고 한다면 중국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이나 게릴라전처럼 나중에 가서야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접근법을 취합니다. 즉 과정 속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인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다 끝나봐야 그 때가서 “아,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었구나.”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게임 중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전투로 들어 가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지금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중국에 정면대결을 요구하면 피할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 중국적 가치로 보편적인 가치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신의 특수성을 계속 요구하면서 2050년대까지 가게 되면 중국적 특수성이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서부터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때 가면 이미 다 이긴 상태에서 비로소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양이 세계정치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마치 체스게임처럼 승부를 그때그때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바둑처럼 다 끝나고 계가를 해 봐야 졌는지 이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는지 끝나 봐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내전을 할 때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도망다니는 게릴라전을 펼치다 실력이 완전히 구비가 되어 정면대결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전면전으로 들어가 결판을 냈습니다. 중국이 보는 지금

의 국제정치는 미국하고 정면대결하기 보다는 좀 더 실력을 길러 힘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될 그 가능성이 있느냐 질문이신데, 내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세 가지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에는 전통문명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다릅니다. 망하더라도 옛날 잘 살다가 망하는 국가와 처음부터 못살다 망한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중국은 문명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없는 문명경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인류의 목표가 이러한 세 가지의 문명의 패턴을 종합해 뛰어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현재 그럴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외로 하고라도 그럴만한 잠재역량이 있느냐고 한다면 중국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세기는 '제3의 길', '제3의 문명' 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일 것입니다.

윤 : 그렇다면 중국지식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국의 지식인들은 체제 내부에 머물러 있어 창조적이기 보다는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서 : 현재로서는 그럴만한 위대한 학자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명경험으로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창의적 발상으로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경험에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이 문제는 중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지식인들은 너무 서구화가 되어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나의 것을 찾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미국 다음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결코 미국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적으로 사고하고 미국적으로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중국지식인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탁월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지식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깐요. 그런데 창의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동양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학자들이 6~70년대 한국학자와 비슷하게 동양적 사고의 틀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분석적이라는 것은 서양적 사고입니다. 중국학자들은 모호하게 그리고 이미지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서양적 사고와 대비되지만 그렇다고 서양의 분석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3의 길’을 준비하다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고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뛰어 넘으려면 일단 분석적인 것을 다 배워야 합니다. 유학을 갔다 중국으로 돌아

온 많은 중국학자들을 보면 서양의 분석적인 이론에 익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참동안 활동하다 보면 중국학계 내에서 서양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자신들이 버렸던 전통을 다시 장착하여 새로운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될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명경험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서양을 모방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학계에서 '제3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학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윤 :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인이나 중국인을 많이 만났었는데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문적으로 서양의 학문을 배우고 문화적으로 중국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인이 미국이나 중국이 협력하는데 있어 외교 영역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서 :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인은 두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인이 중국연구를 할 때 유리합니다.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학자들을 보면 그것이 중국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일본적인 것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납니다. 일본은 가장 서구적인 나라인 것 같은데 가장 비서구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세계를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함정을 넘어가려면 그것이 깨뜨려야 합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깨져야 합니다. 한국사람은 깨고 나올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중국학이라는 것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다 극복해서 '제3의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의 중국학 관련 세대를 구분한 적이 있는데 1세대로는 김준엽, 김상엽, 민두기 선생님 같은 분들입니다. 1세대 특징은 김준엽 선생님을 제외하고 일제강점기에 연구하셨던 분들이기에 한문도 잘 알고 일본어도 알고 영어도 알았지만 중국의 변화된 현실을 아무도 체험을 못했습니다. 김준엽 선생님은 중국에서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가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료도 일본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의 가장 큰 강점은 훈고학적인 선비 전통입니다. 자료를 꼼꼼히 읽고 글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선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분들의 최대 약점은 서양의 사회과학적 분석방법과 이론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2차대전 후 미국이 만들어 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당연히 사회과학을 몰랐습니다.

나와 같은 2세대 역시 중국을 전혀 가보지도 못했으나 사회과학적인 훈련은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회과학적인 훈련을 받고 사회과학의 대상으로서 중국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현장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분석하듯이 중국을 분석을 했기에 이론은 알고 있으나 현장성, 실증성은 없는 이것이 우리세대의 약점입니다.

3세대는 92년에 수교 이후에 중국에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중국에 유학 가서 중국에서 살아도 보고 실제로 중국을 본 세대입니다. 중국연구의 실증성과 현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약점은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승을 못했습니다. 사회과학적 이론에 대한 공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은 중국에 몰입하다 보니까 중국적 논리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이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론을 통해 봐야 중국을 객관화할 수 있는데 중국 속에 빠져 이론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세대는 2~3세대의 장점과 단점을 다 넘어서 이론과 실재를 다 봐야 합니다. 중국을 밖에서 볼 수도 있어야 하고 안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어야 4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중국연구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학자들은 중국본토학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학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4세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